



영국 정치권의 노동 관련 총선 공약

하세정 (영국 LSE 경제지리학 박사과정)

■ 머리말

영국에서 총선을 앞둔 해의 가을에 치르는 각 정당 및 이익단체들의 전당대회에서는 총선을 대비한 대표적인 정책이나 노선이 발표되곤 한다. 2009년 9월에도 중순에 시작된 영국노동총연맹(TUC)을 필두로 여당인 노동당과 야당들의 전당대회가 이어졌다. 경제위기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던 상황인지라 주요 공약들이 경제와 노동시장 회복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지워진 여당을 제치고, 정권 교체가 유력해 보였던 당시 분위기에서 제1야당인 보수당이 여당의 기존 정책들을 뒤집는, 자신감에 찬 공약들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여당도 암담한 예상 속에서 수성을 위해 몇 가지 차별화된 정책들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금번의 총선에서 가장 큰 승부처가 될 정부 재정적자 문제와 실업 문제에 대한 여당인 노동당과 제1야당인 보수당의 선거 공약을 비교해 본다.

■ 정부 재정적자 해소

경제위기 후의 총선이기 때문에 경제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적자 및 지출 축소에 대한 정당 간의 입장 차가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 해결은 직접적인 노동정책은

아니지만, 막대한 규모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경제와 고용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2007년까지 GDP의 3% 미만을 유지해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합의된 3% 선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은행권 구제금융에 855억 파운드(한화 145조 원)가 들어가면서, 재정적자가 1,013억 파운드로 치솟았고, GDP의 7.1%에 달하게 됐다. 이후 경기위기를 거치면서 사회보장비용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부문 연금의 사용자 부담금, EU분담금 등이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평화시 최고 수준인 1,700억 파운드로 경총 뛰어올랐다. 올해 말까지 1,780억 파운드(302조 원)로 그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GDP의 12.8%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재정적자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9년 가을 전당대회에서 노동당과 보수당 모두 재정적자의 시급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와 노동당은 당시 1,700억 파운드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올해까지 1,281억파운드, 2012년까지 910억 파운드(154조 원)로 줄여, 4년 내로 현 수준의 절반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때 재정적자는 GDP의 4.4%를 차지해 다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재무 장관은 최근에는 2017년까지 재정 균형을 이뤄내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비공식적으로 BBC가 입수한 재무부 문건에 따르면, 2010년부터 4년간 전 정부 부처에 걸쳐 매년 약 9.3%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계획 첫해부터 예산 감축안이 삐걱거리고 있다. 2010년 감축 목표의 80%는 지출 감소를 통해, 20%는 세금 인상을 통해 달성하기로 계획했으나, 노동계의 반발과 경기회복에 대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2010년에는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예산 전 보고서에서는 올 정부지출은 명목상 310억 파운드 증가할 예정이다. 2010년 이후의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으나, 2011년부터 2년간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1%로 동결시키기로 해 실질임금을 감소시켰고, 국민의료서비스(NHS)의 IT 비용을 절약해 약 110억 파운드(18조 7천억 원)를 줄일 것이라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야당인 보수당도 재정적자에 대해 여당과 비슷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재정적자 해소에 있어 현 정권보다 운신의 폭이 더 넓은 편이라 지출 감소에 대해 과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편이다. 야당은 집권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50일 내로 비상 예산안을 편성하고, 적어도 첫 번째 방안은 올해부터 적용시킨다는 속전속결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지출 축소는 크게 공공부문 임금 동결과 공공 복지 축소로 요약된다. 우선 2011년 1년간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는 100만

명을 제외한 전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시킬 예정이다. 정부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도 임금을 5% 삭감한 후 향후 5년간 동결시키고, 국회의원의 수도 10%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66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데, 이 시기를 남자의 경우 2016년, 여자의 경우 2020년 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연소득이 5만 파운드(한화 약 8,500만 원)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없애기로 했고, 육아보조금인 ‘아동기금(Child Trust Fund)’을 소득기준 하위 33% 가정과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을 제외하고 삭감할 예정이다.

노동당이든 보수당이든 권좌에 올랐을 때 당면할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양당 모두 2013년까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법론에서도 증세보다는 예산 삭감을 택하고 있고, 공공부문 임금이 주 목표가 되는 점에서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총선과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민감한 시점에서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당의 경우 대외신인도를 고려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과 정부는 겨우 살아난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지출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정부 지출 감소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도 찬반이 극명히 갈리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이다. 산업계는 대체적으로 빠른 재정적자 해결을 통해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투자자를 안심시켜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2017년보다 앞선 2015년까지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올해는 정부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조속한 해결 의지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상공회의소(BCC)’ 측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결안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적인 목표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공공부문 임금 동결이나 공공부문 연금 비용 재검토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영란은행 부총재를 지낸 런던 정경대 하워드 데이비스 총장을 포함한 20인의 경제학자들은 재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서신에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작업은 올해부터 즉시 시작되어야 하며, 증세보다는 지출 축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현재 지출 축소에 미온적인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출 감소 부담은 상당 부분 공공부문 임금 삭감으로 전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노동총연맹(TUC)은 정부 지출이 10% 삭감될 경우 공공부문 근로자 700만 명 중 7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들 모두

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급여 신청자가 45%로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고용 의존도가 큰 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40%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계산에 단순함과 과장이 섞여 있기는 하나, 공공지출 축소가 자칫하면 풍선 효과로 다른 형태의 공공지출로만 나타나면서, 경제, 고용면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만 초래하는 폐해를 낼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설부튼 공공지출 감소가 경기 불황을 연장시키고,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반대의견으로 내놓고 있다. 총연맹 측에 따르면, 1파운드의 정부지출은 직접 고용, 서비스와 물품 조달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64펜스(1파운드=100펜스)의 추가적인 수입을 올려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출의 29% 정도가 민간부문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10%의 지출 감소는 약 168억 파운드(한화 약 28조 5,000억 원)의 투자가 사라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실업 대책

경제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시기에 치러지는 총선거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 역시 각 정당이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정책 분야가 되었다. 노동당은 여당인 관계로 ‘뉴딜(New Deal)’과 같은 근본적인 실업자 대책 프로그램은 이미 가동 중에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거와 관련된 여당의 실업정책은 주로 경제위기 중 발생한 실업자 구제책에 쏠려 있는 편이다. 총선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더라도, 노동당은 이미 실업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실업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2008년부터 실업자가 양산되자 정부는 기존의 ‘지역고용파트너십(LEP, Local Employment Partnerships)’을 이용해 75만 명을 재취업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본래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목적으로 탄생한 LEP는 지역별로 국영 취업알선기관인 잡센터 플러스와 기업들을 연결하여, 기업들이 장기실업자들에게 멘토링, 직업훈련, 취업경험 및 취업기회를 제공할 경우, 잡센터에서는 이들 기업에게 맞춤형 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기업들의 호응과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실업 해소 효과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실업자를 고려하여, 2010년 4월까지 25만 명의 재취업을 목표로 삼았던 당초 계획을 2010년 말까지 75만 명으로 늘려잡았다. 하지만, 2009년 9월의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노동연금부 장관이 LEP를 통해 50세 이상의 구직자들의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

당시 50세 이상의 실업자는 1년새 50% 증가한 37만 명이었으나, 16~24세의 실업자는 94만 7,000명으로 실업률이 20%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 실업 대책보다 강도 높은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18~24세 실업자 중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에 대해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제공 등을 보장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켰다. 이는 기존 1년 이상의 실업 상태라는 조건에서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또한, 2009년 10월 10억 파운드(한화 약 17조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2011년 3월까지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미래 일자리 기금(Future Jobs Fund)'을 계획했다. 이 기금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가지고 기금에 입찰하면 노동연금부에서 심사 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7만 개 중 최소 12만 개의 일자리를 18~24세의 실업자의 몫으로 돌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까지 이 기금을 통해 10만 4,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당의 실업 대책은 기존의 제도를 큰 틀로 하여, 그 기능을 심분 활용하거나 확대시키면서, 추가 자금을 투하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도전자로서의 보수당은 노동당과의 차별화된 실업 정책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노동당의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핵심인 뉴딜을 정면으로 겨냥한 '근로 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준비중이다. 이 제도 역시 뉴딜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근로연계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보수당이 강조하는 뉴딜과의 차별성은 우선 제도의 간소화에 있다. 뉴딜은 1997년 청년층을 위해 시범 도입한 후 그 효과를 인정받아 실업자의 연령, 개인적·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발달되어 왔다. 보수당은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뉴딜 계획들에 노동당의 다른 고용정책까지 합쳐지면, 대중 홍보, 관련 공무원 교육에 혼선이 빚어지고, 행정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특히, 청년 뉴딜정책과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은 후 근로나 교육을 강제하는 제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뉴딜 계획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서, 해당 실업자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통폐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당의 근로 프로그램은 당의 유일한 재취업 프로그램으로서 노동당의 다양한 뉴딜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 프로그램의 기능을 흡수해 탄생할 예정이다. 근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특징은 취업보조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고, 그 취업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바탕을 둔 아웃소싱은 이미 노동당 정권에서도 유연뉴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보수당은 유연뉴딜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잘못된 인센티브를 주어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단기적인 처방만을 결과로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유연뉴딜에서 제 공자가 취업을 성공시켰을 경우 받는 보수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취업 확률이 높은 준비된 구직자만 선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수당의 주장이다. 보수당은 잘못 유도된 동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근로 프로그램은 개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성공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수당이 지적한 유연뉴딜의 다른 단점은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된 보수 중 40%가 착수금으로 지급되어 성공 여부와 관련성이 약하고, 성공의 잣대가 되는 취업 지속성에 대해서도 26주라는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근로 프로그램에서는 성공 보수는 철저히 성공 여부와 관련시키고, 취업 지속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간도 1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맺음말

금번의 영국 총선에서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얻는 당이 없는 국회가 탄생할 예정이다. 여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주요 정당들 모두 20~30%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을 뿐이다. 전례없이 3연임을 달성할 정도로 지지를 받아온 노동당도 경제 운용과 정부 재정에 대한 실정에 대한 책임으로 과반 득표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여전히 지지율 1위에 있다는 사실은 불안한 경제 상황과 정부 재정적자 문제에 있어, 믿고 맡길 만한 대안 세력으로서 야당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지난 분기 18개월 만에 실업자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공식적으로 불황에서 탈출해 회복을 꿈꾸는 영국에서 과반 정당없는 정치적 불안정은 재정적자 해소와 경제회복을 위한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여전히 암울한 영국의 경제 전망을 반영하듯, 파운드화도 연일 약세를 기록하며, 3년 내 달러 대비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영국이 총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지, 아니면 더욱 큰 경제적 혼란으로 치달을지 지켜볼 일이다. **KLI**

참고문헌

< 웹사이트 >

- 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labour.org.uk/labour_policies
- 보수당 홈페이지 <http://www.conservatives.com/Policy.aspx>

< 신문기사 >

- Personneltoday.com, 2009년 9월 29일, 'Work minister to create jobs for older people, despite youth unemployment' <http://www.personneltoday.com/articles/2009/09/29/52350/work-minister-to-create-jobs-for-older-people-despite-youth-unemployment.html>
- Personneltoday.com, 2009년 10월 2일, 'Labour Party Conference: Round-up of employment issue debates' <http://www.personneltoday.com/articles/2009/10/02/52402/labour-party-conference-round-up-of-employment-issue-debates.html>
- Personneltoday.com, 2009년 10월 8일, 'Jobcentre Plus to face private competition under Conservatives' <http://www.personneltoday.com/articles/2009/10/08/52463/jobcentre-plus-to-face-private-competition-under-conservatives.html>
- Personneltoday.com, 2009년 10월 9일, 'Conservative Party Conference: Policy round-up' <http://www.personneltoday.com/articles/2009/10/09/52486/conservative-party-conference-policy-round-up.html>
- BBC, 2010년 2월 14일, 'Economists urge swift action to reduce budget deficit' <http://news.bbc.co.uk/1/hi/8514767.stm>
- BBC, 2010년 3월 8일, 'Business leaders urge faster action on UK's £178bn debt' <http://news.bbc.co.uk/1/hi/business/8554353.stm>